

건설현장 인력난 심화

-공급부족에 수준도 떨어져-

IMF이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건설업계가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힘입어 지난해부터 활황세를 타고 있으나, 막상 건설현장에서는 기능인력을 구하지 못해 전전공공하고 있다. 건설업계 일부에서는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예전의 건설인력 파동이 재현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능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의 문제점과 대책을 살펴보았다.

〈취재 | 왕희삼 기자〉

고임금에도 사람없어

건설현장의 기능인력 부족이 어제 오늘 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젊은이들의 3D업종 기피 등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 일선 현장에 기능인력이 태부족, 심각한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일당 10~15만원에도 숙련공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 때문에 힘들게 공사를 수주해 놓고도 수익성을 맞추지 못해 인력수급 계약을 미루는 현상이 다반사고, 준공일자를 맞추기 위해 웃돈을 주고 다른 현장의 인력을 빼오는 도미노현상이 이어지는 악순환을 빚고 있다.

더군다나 이같은 파행적인 운영이 수익성 악화, 공기지연,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현재 건설현장 기능인력의 대부분은 50대 이상의 노년층이 대부분으로 20~30대의 젊은 기능인력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젊은 건설인력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대부분은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조선족 출신이어서 국내 건설인력과의 마찰, 조선족끼리의 충돌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요즘의 건설현장에서 조선족 출신의 기능인력 없이는 현장을 꾸리기 힘듭니다. 특히 철근이나 형틀 등의 분야에서는 80% 이상이 조선족 출신의 건설인력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 없이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들 조선족 출신 기능인력은 단돈 몇 천 원의 임금에도 쉽게 다른 건설현장으로 옮기는 등의 문제가 있어 현장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앙건설의 배영수 현장감독의 말처럼, 실제 기자가 들러본 창신동, 신림동, 성남시 모란역 등의 새벽 인력 시장에서 이 같은 사례를 여럿 찾아볼 수 있었다. 모란역에서 만난 조선족출신 김운경 씨(조선족 출신)는 “대형공사는 근로여건이 까다롭고 임금도

적은 편이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간섭이 적고 돈 많이 주는 데를 최고로 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국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숙련공 자리를 비숙련공으로 대체

전문가들은 이러한 건설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는 필연적으로 기능수준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건설현장에 새로운 젊은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현재의 기능인력의 노령화로 인한 공급부족이 지속되면, 숙련공의 일자리를 비숙련공이 대체하는 등 부실시공의 문제점을 잉태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01년 9월 현재 건설현장의 기능인력의 평균 연령은 47.6세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연령대별 건설기능인력 증감 추이를 보면, 40대 이상은 59%에서 63%로 증가하였지만, 30대 이하는 41%에서 37%로, 20대 이하의 건설취업 비중은 1983년에는 30.8%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에는 13.1%, 2001년 9월에는 9.9%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 기능인력을 숙련공과 비숙련공으로 구분하여 신규진입과 인력유출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수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비숙련공은 노동력 유출·입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부족도가 덜 하였으나, 숙련공의 경우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유출·입이 거의 없고, 부족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돼 건설현장의 인력수급의 대처방안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의 확대, 건설인력관리센터의 설립, 경력관리제도의 보완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존 인력의 관리강화와 젊은 기능인력의 적극적인 유인책이 동반되지 않는 한 유명무실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미지 개선 우선돼야

건설현장의 기능인력 부족과 기능 수준 저하는 우리만이 아닌 전세계적인 문제. 일본의 경우 80년대부터 건설산업에 대한 일반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젊은 인력의 유입부족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문제를 인식한 일본정부는 95년 발표된 ‘건설산업정책대강’과 2000년부터 시작된 3년간의 건설산업구조개혁 프로그램에서 건설노동력 확보를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도 CII(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는 99년 '비전2020' 보고서에서 미국 건설산업의 미래 전망을 하면서 건설인력을 주요 핵심과제로 다루고 있다.

이는 선진국들 역시 건설 기능인력의 수급 균형을 맞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선진국들은 이에 대해서 기술 발전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건설자동화 및 중장비 사용 확대, 고성능 건설자재 개발 및 활용, IT기술도입으로 현장 작업 대기시간 감축에 의한 생산성 향상, 모듈화·선조립·공장제작 등 공법개선, 재설계·재시공

예방으로 추가작업 발생 방지, 기능 및 직종 통합에 의한 다기능 인력양성, 시공 프로세스 개선에 의한 작업 생산성 향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기에 덧붙여, 발주자·설계자·시공자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설현장 기능인력의 대체수요 노력뿐 아니라 결과까지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력난의 근본적인 문제가 건설인력의 낮은 사회적 인식에 있는 만큼 이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안전 등 현장여건의 개선과 최소한의 생계보장 등 근로조건 및 복지, 교육 및 자격제도, 이미지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는게 공통된 의견이다. (㉞)